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

의안 번호	8304
----------	------

발의연월일 : 2025. 2. 20.

발 의 자 : 김준형 · 황운하 · 김재원
강경숙 · 이해민 · 정춘생
서왕진 · 서영교 · 박지원
박은정 · 차규근 · 김선민
신장식 · 백선희 · 권칠승
이재강 의원(16인)

주 문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일방적인 무역 장벽 강화, 자원 이기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글로벌 경제협력 질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유무역 질서를 선도해 왔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 경제 질서를 구축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이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상대로 한 관세전쟁을 선포하며, 스스로 구축한 자유무역 질서를 뒤엎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워 동맹국을 포함한 상대국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지구적 차원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저해하고, 다자주의적 자유무역 체제를 약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 심화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과 삶에 커다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합심하여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룬 세계 유일의 국가이며, 이러한 성공은 비교적 공정한 시장경제와 자유로운 국제 무역체제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의 번영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해 왔으며, 특히 수출은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기에 자유무역 체제의 후퇴는 그 어떤 나라보다 대한민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무역 체제를 보호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를 증진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무역 체제 구축과 보호를 위해 미국과 우방국들이 기울여온 노력과 협력에 경의를 표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 원칙이 한국경제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자무역체제(WTO, RCEP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

유무역을 촉진하며, 글로벌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을 결의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무역 질서를 강력히 지지하며,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무역 조치가 국민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정부가 미국, EU, 일본, 중국, 아세안 등 주요 경제 강국들과 협력하여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다자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을 비롯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우리 경제, 국민, 그리고 해외 진출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하며, 정부가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무역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외교·통상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자유무역은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과 번영의 핵심 요소이며, 개방적이고 공정한 자유무역 질서의 유지·확대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규칙에 기반을 둔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보호무역 조치 강화 가능성이 커졌으며, 특히,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동맹국까지 예외 없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하는 등 국제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사정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무역 질서의 변화가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결의안을 제안함.